

여·야 예비후보 제2공항 입장차 뚜렷

■ 본보, 4·15총선 주자들 서면 인터뷰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도민합의 전제 아래 추진 무게 중심
 미래통합당 도민 숙원사업·추진 강행 필요성 강조

4·15총선 제주지역 예비후보들이 제주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도민합의를 전제로 한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반해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들은 추진 강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제주시당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문제는 반드시 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며 “공론화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선거구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민주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 제주국 제공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김영진 예비후보는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같은당 구자현 예비후보도 “제1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안전위험까지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을 하지 말자는 것은 1차산업, 관광산업, 미래산업 등 제주의 주력산업 전체를 포기하자는 주장과 같다”며 제2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고, 장성철 예비후보도 “제주 제2공항 정상적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는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KTX라는 대안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제주시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

영훈 예비후보는 “더 이상은 국책사업으로 이런 갈등이 재현되지는 않는다. 정치인은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갈등이 아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제주도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선거구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찬성과 반대로 얼룩져서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청을 제2공항 배후지로 옮기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이라고 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2공항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 제기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제2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제2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허웅진 예비후보도 “제2공항은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도 항공 외에 사실당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최우선적인 필수 인프라시설”이라며 “모든 면에서 열악한 서귀포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고대로그자



중국인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행렬 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출국수속을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에 4767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20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등 14개 기관이 총 47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개 정책수단·46개 과제·55개 단위사업에 나선다는 내

용이다.

정책수단별 주요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자립기반과 공급확대 2091억원 ▷전기차 인센티브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276억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산업 혁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다윈스트림 산업육성 124억원 ▷도민참여 에너지거버넌스 등

에너지정책 역량강화 101억원 ▷고효율 에너지사용 기기 및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도입 87억원 등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 도민사회에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확진자 동선 공개 권한 시·도지사에게도”

지난 7일 국무총리 주재한
 코로나19 영상회의서 건의

현행법상 복지부장관 권한
 지자체 업무처리 한계 발생



개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항은 실제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공개 권한을 시·도지사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법상 복지부장관에게 정보공개 권한이 있어 실질적인 대처를 맡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7일 각 부처 및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는 대인 협조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접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자체장에게도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의 정보공

여움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공개 권한은 정부에게 있어 신속한 접촉자 파악 및 방역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에 시급성을 고려해 중앙 정부와의 절충과 협의를 통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 왔다.

아울러 확진환자와 접촉자 이동경로 조사에서도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태다.

원희룡(사진) 지사는 “감염병 확산 속도나 전파력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며 “현재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보다 명문화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공개 채용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 창업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창업 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제주도의 스타트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 등 창업·기술·경영·투

자분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자 선정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채용 원서접수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3일(오후 6시)까지로, 이메일(jccei@ccei.kr)로 PDF파일을 접수해야하고 우편·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기획 / 7면... 김유정의 다시 쓰는 21세기 제주문화사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5주년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도민사회의 행복을 늘 최우선으로
 제주의 희망, 꿈, 행복이 자랄 수 있도록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제주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사업

음료 사업

지역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업

인재지원 사업

사회공헌 사업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 파트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LTD.